

지속가능한 **돌봄**은 가능한가?

—

2022년 10월 27일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01

현황

- 재난과 경제 위기

감염병 재난, 경제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짐

-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하위계층은 하락하고, 상위계층은 증가
- 부동산도 상위 10%의 가구가 약 50%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산의 격차는 매우 큼
-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어려워진 경제, 민생위기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 민간주도, 시장중심 강조
-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하며 생산적 맞춤형 복지 공헌
- 친시장적 감세와 재정준칙 도입 예고
- 사회서비스의 민-관협력
- 공공정책수가 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부재
- 사적연금활성화
- 비대면 진료, 데이터 활용 등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확충했을까?

02

보건복지분야 세부예산

- 총예산
 - 사회서비스(돌봄)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 소득보장
 - 보건의료
-

총예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약자복지를 위한 예산인가?
약자만을 위한 예산이면 충분한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8-22 평균 %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18-23	
총지출	428.8	100	469.6	100	512.3	100	555.8	100	607.7	100	639.0	100.0	100	7.1	9.5	9.1	8.5	8.7	5.2	49.0	
보건·복지·고용	144.6	33.7	161	34.3	180.5	35.4	199.9	36	217.7	35.9	226.6	35.5	35.1	11.7	11.3	12.1	10.7	8.4	4.1	56.7	
(복지부)	63.2	14.7	72.5	15.4	82.5	16.1	90.2	16.2	97.5	16	109.0	17.1	15.7	9.9	14.7	13.8	9.3	7.4	11.8	72.5	
교육	64.2	15	70.6	15	72.6	14.1	71	12.8	84.2	13.8	96.1	15.0	14.1	11.8	10	2.8	-2.2	16.8	14.2	49.7	
문화·체육·관광	6.5	1.5	7.2	1.5	8	1.6	8.4	1.5	9.1	1.5	8.5	1.3	1.5	-5.8	10.8	11.1	5	3.9	-6.5	30.8	
환경	6.9	1.6	7.4	1.6	9	1.7	10.5	1.9	11.9	2	12.4	1.9	1.8	0	7.2	21.6	16.7	12.4	3.9	79.7	
R&D	19.7	4.6	20.5	4.4	24.2	4.7	27.2	4.9	29.8	4.9	30.7	4.8	4.7	1	4.1	18	12.4	8.8	3.0	55.8	
산업·중기·에너지	16.3	3.8	18.8	4	23.7	4.7	29.1	5.2	29.8	5	25.7	4.0	4.5	1.9	15.3	26.1	22.8	6	-18.0	57.7	
SOC	19	4.4	19.8	4.2	23.2	4.3	26	4.7	28.0	4.5	25.1	3.9	4.4	-14	4.2	17.2	12.1	3.8	-10.2	32.1	
농림·수산·식품	19.7	4.6	20	4.3	21.5	4.1	22.4	4	23.7	3.9	24.2	3.8	4.2	0.5	1.5	7.5	4.2	3.4	2.4	22.8	
국방	43.2	10.1	46.7	9.9	50.2	9.8	52.9	9.5	54.6	9.1	57.1	8.9	9.7	7.2	8.1	7.5	5.4	4.5	4.6	32.2	
외교·통일	4.7	1.1	5.1	1.1	5.5	1.1	5.7	1	6.0	1	6.4	1.0	1.1	2.2	8.5	7.8	3.6	5.7	7.3	36.2	
공공질서·안전	19.1	4.5	20.1	4.3	20.8	4.1	21.8	3.9	22.3	3.7	2.9	0.5	4.1	5.5	5.2	3.5	4.8	0.3	2.4	-84.8	
일반·지방행정	69	16.1	76.6	16.3	79	15.7	86.5	15.6	98.1	16	111.7	17.5	15.9	9	11	3.1	9.5	13.4	13.9	61.9	

2023년 예산은

본예산(607.7조 원) 대비 5.2% 증가, 추경(679.5조 원) 대비 6.0% 삭감

구 분	2022년		2023년 안(C)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본예산(A)	추경(B)		증감(C-A)	%	증감(C-B)	%
총 지 출	974,767	1,014,100	1,089,918	115,151	11.8	75,818	7.5
【사회복지】	806,484	818,709	920,659	114,175	14.2	101,950	12.5
○기초생활보장	144,597	155,372	164,059	19,462	13.5	8,687	5.6
○취약계층지원	41,482	41,500	46,026	4,544	11.0	4,526	10.9
○공적연금	314,921	314,921	371,590	56,669	18.0	56,669	18.0
○사회복지일반	9,072	9,061	9,634	562	6.2	573	6.3
○아동·보육	91,820	90,773	98,206	6,386	7.0	7,433	8.2
○노인	204,592	207,081	231,143	26,551	13.0	24,062	11.6
【보 건】	168,283	195,391	169,259	976	0.6	△26,132	△13.4
○보건의료	49,041	76,149	45,157	△3,884	△7.9	△30,992	△40.7
○건강보험	119,242	119,242	124,102	4,860	4.1	4,860	4.1

사회복지분야 예산

본예산 대비로 **11.8%** 증가, 추경 대비로는 **7.5%** 증가

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은 가능한가?

보육분야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총계	5,893,110	5,818,712	6,836,430	6,655,460	836,748	14.4
영유아보육료 지원	3,202,771	3,178,111	3,073,282	3,006,888	△171,223	△5.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88,041	1,688,041	1,846,978	1,743,602	55,561	3.3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373,132	348,703	1,624,914	1,624,914	1,276,211	366.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08,163	482,907	175,854	175,854	△307,053	△63.6
어린이집 확충	60,903	60,903	51,786	49,170	△11,733	△19.3
시간제보육 지원	20,882	20,882	20,853	20,413	△469	△2.2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19,290	19,290	28,410	21,772	2,482	12.9
보육사업관리	5,693	5,640	6,139	4,655	△985	△17.5
어린이집 기능보강	3,859	3,859	3,473	3,473	△386	△10.0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942	4,942	-	-	△4,942	△100.0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227	2,227	1,892	1,892	△335	△15.0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1,165	1,165	1,179	1,179	14	1.2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133	1,133	963	941	△192	△16.9
공공형어린이집	659	659	664	664	5	0.8
표준보육비용 조사	200	200	-	-	△200	△100.0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어린이집)	50	50	43	43	-7	-14.0

1)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 보강 예산 삭감

- 어린이집 확충은 2023년 492억 원으로 전년 609억 원에서 대폭 삭감(△19.3%)
 - 국공립 신축이 전년대비 29.3% 삭감, 국공립 장기임차 46.6% 삭감, 매입 어린이집 예산 33.3% 삭감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은 신규 2개소로 20.9% 증가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5% 불과하고 550개소라는 정책 목표에 한참 모자람
-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도 전년 대비 10% 줄어든 35억 원 편성
 - 2021년 68억 원이었던 것에 절반도 안됨. 계속 감소 추세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적절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저출생이니 예산이 삭감되어도 되나? NO!!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1조 7,436억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3.3% 증가해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
 - 보육 종사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인상 명목
 - 국공립과 법인 지원인원 1,139명 증가. 반면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은 감소
 - 인건비 단가 1.7% 인상했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함. 또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단가는 동결하고 전체 지원인원도 감소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교사들이 돌볼 수 있는 환경 개선 예산은 삭감!

- 미취학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56.9%, 만 0세는 20.2%('19년 기준) / 어린이집 영유아의 이용률은 80.8%이며, 만 0세의 경우 47.1%까지 급증('21년 기준) → 최근 공보육에 대한 투자로 인한 결과

아동 · 청소년 복지 분야

1) 요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은 약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예산과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체계 예산은 각각 437억 원과 129억 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각각 59.3%, 66.7% 증가
 - 자립수당 지급기간 3년 → 5년, 월 30만 원 → 월 35만 원

2)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2023년 약 2조 2,5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2% 감소
 - 출산율 저하에 따라 자연감소한 것
 -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함

3) 초등돌봄 사업 예산

-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총 2,2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관련 예산은 총 580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8.9% 증가
 - 운영비 지원단가 월 3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신규 197개소 추가
-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시설확충 예산 210억 원이 100% 삭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시설확충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학교돌봄터 사업 교실은 2022년 150실에서 2023년 100실로 감소
- 여성가족부의 0~12세 아동 대상 가정돌봄서비스 예산인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3,546억 원으로 27.7% 증가

노인복지 분야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총계> (1)+(2)	20,459,160	20,708,133	23,305,848	23,048,908	2,340,775	11.3
일반회계+특별회계 (1)	20,245,144	20,494,117	23,110,387	22,853,447	2,359,330	11.5
o 기초연금 지원	16,114,031	16,289,504	18,530,432	18,530,432	2,240,928	13.8
양로시설 운영지원	1,222	1,222	712	0	△1,222	△100.0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9,104	9,104	8,194	8,162	△942	△10.3
공립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타당성 연구 지원	300	300	0	0	△300	△100.0
노인단체 지원	74,243	74,243	72,666	72,666	△1,577	△2.1
노인보호전문기관	11,535	11,535	15,759	11,919	384	3.3
o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36,571	436,571	436,571	436,571	0	0.0
o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442,195	1,442,195	1,570,629	1,447,784	5,589	0.4
망향의동산 관리원 운영지원	416	416	519	429	13	3.1
장사시설설치*	49,792	49,792	41,011	42,338	△7,454	△15.0
고령친화산업육성	2,672	2,672	2,822	2,822	150	5.6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R&D)	5,147	5,147	5,147	5,147	0	0.0
o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035,442	2,035,442	2,355,042	2,244,640	209,198	10.3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484	484	484	484	0	0.0
노인요양시설 확충*	61,990	61,990	70,399	50,053	△11,937	△19.3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	73,500	0	0	△73,500	△100.0
기금 (2)	214,016	214,016	195,461	195,461	△18,555	△8.7
o 치매관리체계구축	207,674	207,674	189,753	189,753	△17,921	△8.6
o 노인건강관리	6,342	6,342	5,708	5,708	△634	△10.0

1) 기초연금

- 2022년 16조 2,895억 원에서 13.8% 증가한 18조 5,304억 원으로 책정
 - 수급자 규모는 지난해 6,312천명에서 6,650천명으로 확대
 -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01,500원에서 321,950원으로 증가
- 노인복지예산에서 기초연금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80.4%로 2022년 79.6%, 2021년 79.0%, 2020년 78.5% 보다 높음
 - 노인복지 대부분이 기초연금에 쓰이며, 노인돌봄, 노인보호, 노인고용, 노인사회참여 등 일반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제한적으로 책정된다는 의미

2) 노인요양시설 확충

- 2023년 노인요양시설확충예산은 501억 원으로 2022년 619억 원 보다 19.3% 감소
 - 일반요양시설을 위한 예산은 56억 원으로 지난해 93억 원 대비 39.9%가 감소, 증개축 또는 개보수를 위한 예산만이 책정되어 신축예산 부재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327억원으로 전년대비 34.2% 삭감
- 국공립 재가요양시설은 1-2%, 시설은 3%정도임.
 - 국공립노인요양원 246개소, 노인장기요양인정자수 1,045천 명 → 4,247명당 1개소에 불과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

- 국공립요양시설 국고보조율 50:50, 그러나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은 80:20!
일반노인요양시설은 설립하지 않고, 치매전담형으로 몰리고 있음



- 국공립돌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공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함. 그러나 민간기관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관련법이 후퇴되어 통과 → 사회서비스원의 우선위탁조항이 삭제됨
-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 통폐합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됨

울산사회서비스원 전국 최초 폐원, 시민단체 "복지 포기"

복지

울산시의회 '복지기관 통폐합' 만장일치 가결... "노동·시민 "노원종합재가센터 폐지 반대" 한목소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돌봄 24시간 체계 전환"한다더니 지원사업 없애

정식 취재 | 2022. 10. 12 07:20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범

☰ ⊕ 가 ⊖



3)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 2023년 예산은 5,02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
 -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도우미사업 등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 3월 시작한 제도
 - 서비스 대상자 규모가 지난해 50만명에서 2023년 55만명으로 10% 늘어남
 - 생활관리사가 2022년 31,250명에서 2023년 34,375명, 서비스 관리자 1,953명에서 2,149명으로 증가
 - 노인인구 증가, 후기노인에서 돌봄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예산일까?

4) 노인보호전문기관

- 11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3% 증가
 - 노인 일인당 노인보호예산은 2022년 1,279원에서 2023년 1,255원으로 축소되고, 학대신고건수당 노인보호예산 2022년 1,840,869원에 2023년 1,759,522원으로 감소
 - 코로나19로 시설노인의 고립도가 증가, 가족과의 상호작용 밀도가 증가 → 노인학대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 큼
-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 노인학대를 위한 대책마련

표 2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증감률

(단위: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사례	13,309	15,482	16,071	16,973	19,391
증감률	10.8	16.3	3.8	5.6	14.2



그림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추이

5)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 2조 354억 원에서 10.3% 증가한 2조 2,446억 원이 편성
 - 예상수입액: 9조9,570억원×20%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2018년 18.4%, 2019년 19.0%... 매년 법정국고지급 미이행

- 점차 늘어나는 노인인구, 이에 걸맞는 보험료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2023년 1조 4,42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0.4% 증가
 - 2020년 740천개, 21년 830천개, 22년 845천개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 2023년은 전년과 동일한 845천개를 성과목표로 예산책정이 이루어짐
- 일자리 유형별 변화 현황
 - 공익형 일자리 : 2022년 608천 명 → 2023년 547명 (10% 감소)
 - 민간형 일자리 : 2022년 167천명 → 190천 명 (13.8% 증가)
- 공익형 일자리 수당지급액 인상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27만 원으로 동결
-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다양함. 실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70% 이상이 소득때문이라고 응답함. 그렇다면 연금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소득보장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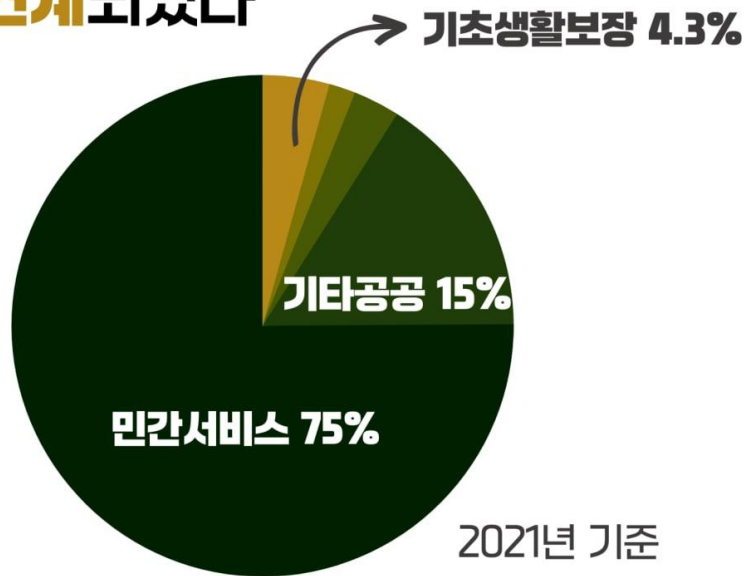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 분야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총계> (1)+(2)+(3)	17,148,757	18,226,289	19,610,882	19,529,403	1,303,114	7.1
기초생활급여 (1)	14,459,689	15,537,221	16,477,195	16,405,912	868,691	5.6
생계급여	5,264,772	5,264,772	6,014,148	6,014,148	749,376	14.2
의료급여	8,123,234	8,123,234	9,098,368	9,098,368	975,134	12.0
해산장제급여	34,841	34,841	39,880	38,210	3,369	9.7
긴급복지	215,639	302,957	330,600	315,486	12,529	4.1
자활사업	696,449	696,449	747,714	693,573	△2,876	△0.4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08,298	108,298	227,662	227,646	119,348	110.2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6,452	16,452	18,821	18,479	2,027	12.3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4	4	2	2	△2	△50.0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0	990,214	0	0	△990,214	△100.0
<건강보험 부문> (2)	384,975	384,975	404,108	393,912	8,937	2.3
차상위계층 지원	381,291	381,291	400,317	390,121	8,830	2.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3,684	3,684	3,791	3,791	107	2.9
<타 부처 소관> (3)	2,304,093	2,304,093	2,729,579	2,729,579	425,486	18.5
주거급여 지원	2,181,925	2,181,925	2,572,266	2,572,266	390,341	17.9
교육급여	122,168	122,168	157,313	157,313	35,145	28.8

1) 생계급여

- 2023년 생계급여 예산은 6조 141억 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약 7,500억 원상향 조정되었다(14.2% 인상)
 -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에 따른 것
 - 수급자 규모의 증가분(2022년 128만명 89.8만 가구 → 2023년 153만명 110만 가구)을 거론하고 있어 사실상 수급자 가구별 실질 급여인상분은 미약할 것
 - 실제 정부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 증가율 목표치 3.65%, 현재 물가상승률 6%이상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어디로 연계되었나



2) 긴급복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3,155억 원으로 전년대비 4.1%로 소폭증가, 그러나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에 지나지 않음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전액삭감 : 본예산에서 전액삭감, 추경에서 편성하는 꿈수

3) 자활사업

- 작년대비 0.4% 삭감된 6,936억 원이 편성됨
 -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운영
 - 가장 급여 단가가 높은 시장진입형의 경우에도 60,420원(1일 최저임금은 76,960원)

4) 주거급여

- 3,903억 원(17.9%) 인상된 2조 5,723억 원이 편성



보건 의료

건강한 삶,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

1) 공공의료 관련 예산

-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보건의료로 분류된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확충’이라는 프로그램명을 기준으로 택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보건의료확충으로 분류된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1.3%, 약 3조 950억 원 삭감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 전년대비 12.8%삭감된 29억 원이 편성(세월호 피해자 10억 원, 그외 19억 원)
- 입원과 진료 인원을 축소하고, 평균진료비는 동일하게 하여 계획
-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 의료취약 계층, 세월호 피해자, 노숙인 등을 지원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2,900	2,900	2,900	3,300	2,880

-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 2023년 296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대비 39.5% 삭감. 2022년에도 약 10.2% 감액되었음
-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과 보건의료장비 지원, 병원선 수리 등을 지원하는 목적

- 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사업
 - 전년대비 11.6% 삭감된 1,506억 원이 편성
 -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목적
- 재난적 의료비 사업, 차상위 계층 의료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9% 소폭 인상된 38억 원이 책정. 차상위 계층 의료 지원도 2.3% 인상에 그침
-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 2022년 62억 원에서 1.5억 원 감액되어 총 약 60억 원이 편성
 -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대지급하여 의료비가 없어 치료에 배제된 상황을 방지하고자 시행. 그간 집행률이 100%인데도 삭감

2) 건강보험 국고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2023년도 예상수입액 76조 1,822억 원(14% 10조 6,655억 원 + 6% 4조 5,709억 원 = 15조 2,364억 원)



3) 보건산업 관련

- 사업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보건산업으로 구분되는 사업의 종류가 가장 많고, 대부분 R&D 사업
 - 사업의 금액이 적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됨
 - 사업 추진의 합목적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발생

AI 기반의 응급실 환자 대응기술 개발(R&D), K-Medi 융합 인재 양성사업(R&D),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R&D), 가상환자·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 가치기반 보건의료 중심 시스템과학 연구개발(R&D), 감염병 방역기술개발(R&D),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R&D), 공공의료기술 강화 필수의료기기 개발(R&D), 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R&D), 국가신약개발사업(R&D), 글로벌 헬스기술연구기금(ODA,R&D),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R&D),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R&D),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R&D), 뇌신경계질환 임상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R&D),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R&D), 디지털병리기반의 암전문AI분석 솔루션 개발 사업(R&D),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R&D),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R&D),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백신기반기술 개발(R&D),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R&D),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사업(R&D),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병원기반인간마이크로바이옴연구개발(R&D),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개발 사업(R&D),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보건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술개발사업(R&D),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일반회계)(R&D), 비대면 진료기술개발(R&D), 사회서비스개발연구사업(R&D),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R&D),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R&D),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R&D),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R&D), 신변종감염병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R&D), 신속 범용 백신 기술개발(R&D), 실사용데이터(RWD) 기반의 임상연구지원(R&D), 암생존자 중심 근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사업(R&D), 약물 전달 치료기술 개발 사업(R&D), 연구중심병원육성(R&D), 우주의학 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R&D),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R&D),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R&D),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R&D)(복지부),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입자방사선치료 연구사업(R&D),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전자약기술개발(R&D),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기반 CDSS 개발(R&D),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R&D), 질환유효성평가센터(R&D),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R&D),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R&D),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복지부),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R&D),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R&D),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R&D), 혁신형 제약기업 글로벌 공동연구 및 임상 지원(R&D),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R&D),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R&D)

3) 보건산업 관련

-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R&D
 - 올해 56억 원 순증
 -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
-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R&D)
 - 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제자리인데, 돌봄로봇?
 - 2년동안 예산이 편성되었던 돌봄 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R&D) 사업과 목적과 취지가 비슷 →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 돌봄스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에 그침